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873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8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주문

- 교통복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여 도시철도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서울시 도시철도 1~8호선은 영업연장 301.4km, 지하철역 278개역, 전동차 3,530량 규모로 하루 54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19년 말 부채는 4조 6천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손실 5,865억원 중 3,709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비교할 때 승객수요는 27.6%가 줄고, 운영수입 또한 26.1%가 감소하여 상반기 손실만 4,817억원으로 '20년 한해 적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는 금년 예산으로 지하

철 부채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해 6,723억원과 추경으로 코로나 방역비용 195억원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한계에 도달한 상황임

- 또한 '74년 8월부터 개통한 서울시 도시철도는 개통후 46년이 지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나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시설투자비 마련은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서울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바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 없음

4. 이 송 처 :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5. 불 입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서울시 도시철도 1~8호선은 영업연장 301.4km, 지하철역 278개역, 전동차 3,530량 규모로 하루 54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19년 말 부채는 4조 6천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손실 5,865억원 중 3,709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로 나타나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비교할 때 승객수요는 약 27.6%가 줄고, 운영수입 또한 26.1%가 감소하여 상반기 손실만 4,817억원으로 '20년 한해 적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는 금년 예산으로 지하철 관련 부채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해 6,723억원과 3회 추경으로 코로나 방역비용 195억원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부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유지하기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74년 8월부터 개통한 서울시 도시철도는 개통후 46년이 지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간 소요된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총 1조 3,860억원 중 일부인 1,254억원만 국비를 지원받아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금 지급 등으로 메말라가는 지방재정에서 시설투자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 도시철도의 운영 범위가 과거 서울과 인근 도시의 연결에서 이제는 천안, 아산, 춘천까지 환승·연계됨에 따라 서울시 도시철도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간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서울시 도시철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임수송 적용대상도 늘어나 서울시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대로 놓아둔다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임수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안정적인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철도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제·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발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노후화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